2025-09-16

Economy Brief

난항이 불가피한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한-미간 관세협상 핵심 사항인 3,500억 달러 투자를 두고 양국간 적지 않은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짐

일본과 같은 '투자 백지수표' 형태의 대미 투자는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공산이 있음

최소한 일본과 같은 '투자 백지수표' 방식은 피하는 협상안 타결이 필요해 보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 난항이 불가피

한-미간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타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미간 관세협상 핵심 사항인 3,500억 달러 투자를 두고 양국간 적지 않은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측은 한국측에 일본과 같은 방식의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골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측이 약속한 3,500억 달러를 미국내 투자를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단기간 입금,

둘째, 투자 이익의 경우 투자 원금 회수 이전까지 투자이익 배분 비율을 한국과 미국이 9대1로 하지만 투자원금 회수 이후에는 배분 비율을 한국과 미국이 1대9 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미일간에 합의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각종 기사 참조)

1)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지휘할 것이며,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미국이 관리하게 된다', '일본이 투자를 거부할 경우 관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투자처를 선정하며, 투자시점은 2029년 1월 19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며 특정시점까지 투자 청산 및 처분의무는 없다. 투자 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3)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미국이 지정한 계좌에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제공한다.
4) 프로젝트 벤더나 공급업체 선정 시 투자위원회는 가능하면 외국기업 대신에 일본 기업을 우선 선택한다.
5) 미국은 각 투자에 대해 특별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SPC는 미국 또는 미국이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6)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의약품, 금속,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경제 및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촉진하는 분야에 집중된다. 투자로 발생한 현금 흐름은 일정 배당 기준까지는 양국이 50%씩 분배하고, 그 이후에는 일본 10%, 미국이 90% 비율로 분배된다.

당초 우리측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나리오는 지분투자를 5% 수준에 그치고 직접 현금(=달러)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 형태로 합의할 생각이었음을 감안하면 미국과 우리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와의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미국측 입장에서는 일본 사례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 당연하고 우리 입장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경제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2>에서 보듯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5,500억 달러)는 일본 명목 GDP와 전체 예산액 대비 각각 13.7%, 31.2%이지만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한국 명목 GDP와 전체 예산액 대비 각각 18.7%, 69.4%에 달한다. 특히, 외환보유액 대비로는 일본은 42.2% 수준이지만 한국은 84.1%에 이른다.

만약 미국측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단기적으로 국내 달러 환전 수요 급증에 따른 달러-원 환율 급등 가능성은 물론 국내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금융 혹은 외환시장의 잠재적 취약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내외 예기치 못한 금융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미국 요구대로라면)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했다. 시장에서 원화를 대거 투입해 달러를 조달할 경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아 외환시장 붕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조선경제, 9월 15일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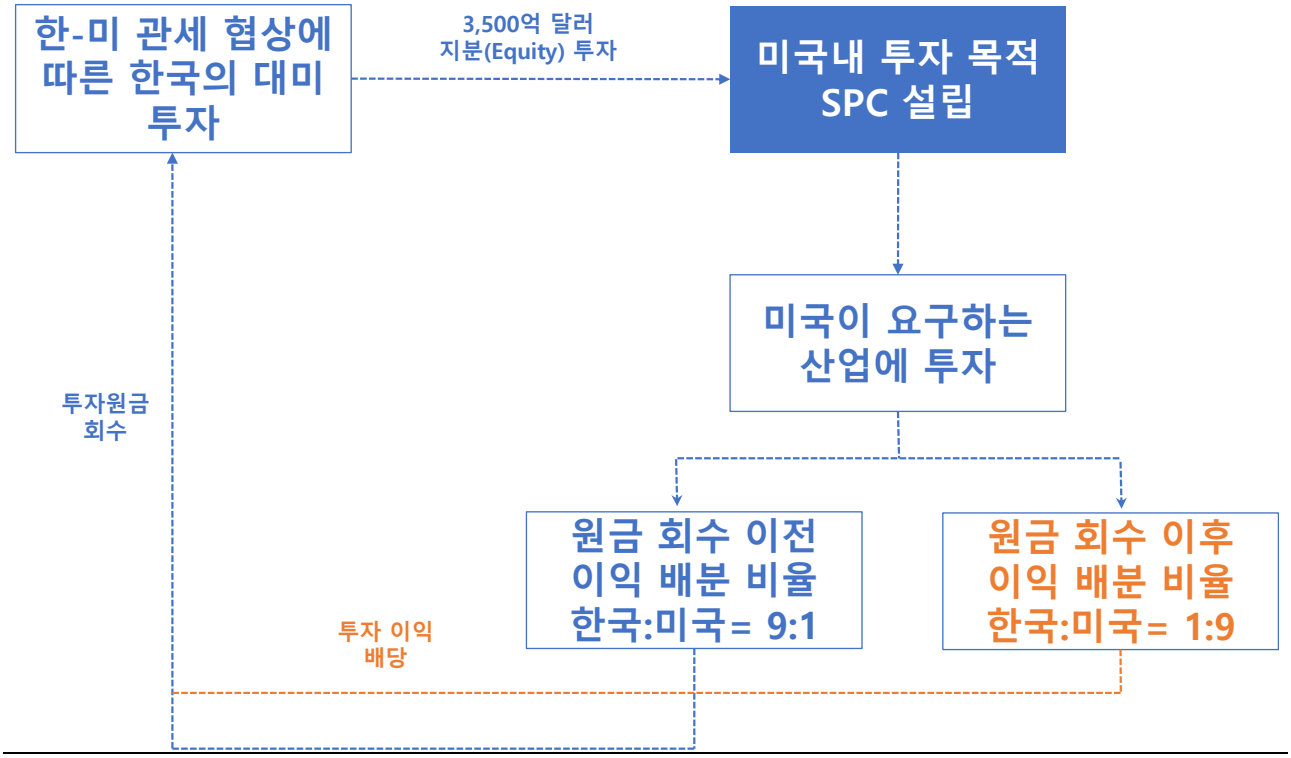
투자 회수기간도 문제도 대미 투자를 실행하고 이에 따른 투자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경기사이클에 따라서 투자 원금 회수기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상당기간 대미 투자에 국내 외화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대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 혹은 외평채 발행 등의 형태로 재원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내 재정에도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투자 백지수표' 방식은 피하는 협상이 필요

미국측이 요구하는 일본과 같은 '투자 백지수표' 형태의 대미 투자는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공산이 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대규모 직접방식의 대미 투자가 될 경우 달러 재원조달 및 환전 수요 등으로 외환시장 및 국채시장에도 부담을 줄 여지가 있다. 물론 미국측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허용해준다면 외환시장 불안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겠지만 달러 재원 조달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를 감안할 때 투자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일본과 같은 '투자 백지수표' 방식은 피하는 협상안 타결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1. 미국측이 요구하는 우리측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자료: 각종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

그림2. 관세 협상에 기반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액 비교

		한국	일본
대미 투자 합의 규모(A)	10억 달러	350	550
24년 명목 GDP 규모(B)	10억 달러	1870	4026
외환보유액(25년 7월, C)	10억 달러	416	1,304
24년 경상수지(D)	10억 달러	99	193
24년 예산 규모(E)	10억 달러	504	1,765
24년 대미 수출액(F)	10억 달러	128	141
A/B	%	18.7	13.7
A/C	%	84.1	42.2
A/D	%	353.5	285.0
A/E	%	69.4	31.2
A/F	%	273.4	390.1

자료: IMF, 이데일리,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데일리 기사 참조)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